

# 공정성과 정부신뢰: 서울시를 중심으로

박 정 인\*  
박 민 근\*\*

## 국문요약

이 연구는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지방정부가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공정성을 강조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해마다 조사하는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였으며, 최소자승 회귀분석, Ordered Probit 회귀분석, 베이지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병역 의무 이행, 성별에 따른 대우, 과세 및 납세,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의 정부신뢰에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에 대한 인식 중 법 집행과 정치 활동은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이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공정성 증진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 집행과 정치 활동 분야보다는 복지혜택, 성별 격차 완화, 과세 및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써야함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는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공정성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정부신뢰, 공정성, 서울시, 서울서베이, 베이지안 회귀분석

##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각광받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난도 외,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정치적 혼란과 논란은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들의 공정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공정성이 사회적 변명과 정치적 안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법의 적용, 부의 분배, 병역이행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탄핵시위, 파업, 윤리적이지만 못한 기업의 불매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부도덕한 오너 일가의 운영이 불매운동을 촉진한 사례가 있으며, 이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문제였다(한국경제, 2019).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제도의 영역 전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

\* 제1저자

\*\* 교신저자

다. 대표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앞당겨진 국민연금의 고갈시기와 세대별 형평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문주옥·김민정, 2023). 더불어 성별갈등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특정 사회적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증폭되고 있다(홍지아, 2022). 병역문제 또한 성별갈등 및 사회적 계급갈등과 혼합되어 끊임없는 파열음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홍찬숙,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기관의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세계적인 파급력을 보인 코로나19의 경우, 정부신뢰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의 경우 보건 아노미 상태에 직면한 선례가 있다(Bargain & Aminjonov, 2020; McCarthy et al., 2022). 반대로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천재지변, 금융위기와 같은 강한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Miller, 2016). 이처럼 정부의 신뢰는 국가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연구들이 공정성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집중해왔다(이지호·이현우, 2015; 윤건·서정욱, 2016; 이우진·하솔잎, 2016;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성은 사회·제도·정책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조직행태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은 정부신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건·서정욱, 2016; 이우진·하솔잎, 2016;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공정성에 의해 정부신뢰가 결정될 수 있기에 공정성 확보는 주요한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지호·이현우, 2015). 게다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역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와 민원을 지방정부에서 해결하고 있기에 지방정부는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산업·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도시를 대상으로 공정과 정부신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에서 정부신뢰와 공정성의 관계는 확인이 되었지만, 어떠한 측면의 공정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윤건·서정욱, 2016; 이우진·하솔잎, 2016;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떤 유형의 공정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에 대한 인식은 주로 국가단위의 조사를 통해서만 검증하고 있기에, 대도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윤건·서정욱, 2016; 고대유, 2022).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를 통해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서울서베이는 이종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역균형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병역 의무 이행 등과 같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정부신뢰 또한 조사하고 있기에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다. 연구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자승기법(ordinary least squares: OLS)과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더 나아가 연구

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베이지안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공정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서울시가 정부신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1. 정부신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짐과 동시에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정부신뢰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되었다. 정부신뢰의 정의에는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Hitlin and Shutava(2022)는 정부신뢰를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현국·김윤호(2014)는 정부신뢰를 “시민들이 정부조직(서울시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위험)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이현국·김윤호, 2014, p.3). 그러나 정부신뢰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Tomankova(2019)는 사회·기업·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정의하였다. Tomankova(2019)는 정부신뢰를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즉각적이거나 예상되는 물질적, 이념적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일려는 개인의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물질적, 이념적 비용을 수용하려는 개인의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신뢰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조직 등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응답 혹은 신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신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능력(competence), 선의(benevolence), 정직성(honesty)이다(Grimmelikhuijsen et al., 2013). 능력은 정부 조직 자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적 차원에서의 신뢰와 관련이 있다(Grimmelikhuijsen et al., 2013). 선의와 정직성은 윤리적 차원에서의 신뢰와 관련이 있으며, 선의는 정부 행동의 의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직성은 청렴성과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Grimmelikhuijsen et al., 2013). Grimmelikhuijsen et al.(2013)과 이현국·김윤호(2014)의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능력, 선의, 정직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반면에, 윤건·서정욱(2016), 임재훈·윤영채(2021), 김나연(2023), 김동욱 외(2023) 등의 다수의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조직 등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정부신뢰를 측정하였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 사회자본, 정부성과, 정부서비스 성과, 공정성, 청렴성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박희봉 외, 2003; 이현국·김윤호, 2014; 이숙중·유희정, 2015; 박푸름·김재일, 2018; 신상준 외, 2018; 최예나, 2018; 김정숙·정다정, 2019; 성민아·원숙연, 2021; 최성락·전별, 2019; 2021; 임재훈·윤영채, 2021; 정광호 외,

2021).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살펴봐왔으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정부신뢰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현국·김윤호(2014)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서비스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24개의 정부서비스 중 시민들과의 소통,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공급, 취약계층지원, 경찰(치안), 실업문제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가 수준에서도 연구가 이뤄졌는데, 신상준 외(2018)는 한국, 타이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개국 모두에서 국가 전반에 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신상준 외, 2018). 이나경·정영아(2021)는 World Value Survey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일반신뢰와 정부신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지출이 실업률과 정부신뢰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정부신뢰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었으나, 정부신뢰를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모두 묶어서 측정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역마다 격차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연구할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신뢰를 살펴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 2. 공정성

공정성은 형평성, 정의, 공감, 기회, 차별금지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다면적 개념이다(Avelino-Silva et al., 2023). 또한 사회 내에서 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한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Chen et al., 2019).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공정성은 외부 사회적 구조보다는 내부 프로세스와 개인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정성이 개인의 가치 및 신념,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Chen et al., 2019).

공정성은 조직행태 측면에서의 공정성과 사회 측면에서의 공정성이 연구되었다. 조직행태 측면에서의 공정성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구분된다(Adams, 2005).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결정 결과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결정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이며,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권위자가 결정을 실행하는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이다(Adams, 2005). 분배공정성은 자원 분배 시, 공정성의 규범을 따를 때 촉진되며, 절차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관성 있고 수정 가능하며, 편향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등 특정 절차적 규칙을 활용함으로써 촉진된다

(Adams, 2005). 또한 상호작용공정성은 존엄,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우를 통해 촉진되는 대인적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정직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촉진되는 정보적 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을 포함한다(Adams, 2005). 박종민·배정현(2011), 신상준·이숙중(2016), 임재훈·윤영채(2021) 등의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통해 공정성을 측정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은 전반적으로 사회 제도나 정책 등이 제 기능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공정성은 Turner(1986)가 제시한 기회, 결과, 조건, 본체론적 평등에서 비롯된다. 기회의 평등은 형평성 차원에서의 공정성이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결과의 평등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것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조건의 평등은 차별없이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본체론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명제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기회, 결과, 조건의 평등을 통해 공정성을 측정하고 있다(이건, 2015;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동욱 외(2023)는 교육 및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수혜 기회, 국토발전, 법 집행, 경제 및 사회 분배구조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공정성을 측정하였다. 고대유(2022)의 연구에서는 교육기회, 취업기회, 복지혜택기회를 기회공정성으로, 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의 공공부문이 공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통해 조건공정성을 보고 있었다. 이진(2015) 또한 기회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3. 공정성과 정부신뢰

공정성과 정부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정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따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행태 측면에서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공정성의 유형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박종민·배정현, 2011; 신상준·이숙중, 2016; 임재훈·윤영채, 2021). 임재훈·윤영채(2021)는 분위수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정부신뢰가 높은 분위일수록 절차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반면, 정부신뢰가 높은 분위일수록 상호작용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준·이숙중(2016)은 상호작용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절차공정성의 경우 사회를 신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박종민·배정현(2011)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나(2018), 최성락·전별(2019)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공정성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나 공정성에 대한 측정을 보았을 때, 상호작용공정성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성락·전별(2019)은 정부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전문성보다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예나(2018)의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행정서비스를 공평하고 올바르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



고,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며, 공정성과 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 정보비대칭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정성은 조직행태 차원에서 결정 과정, 결정 결과,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에 공정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윤건·서정옥, 2016; 이우진·하슬잎, 2016;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이러한 연구들에서 논하는 공정성은 사회 혹은 제도, 정책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동욱 외(2023)는 사회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사회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외, 2023). 김나연(2023)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으며,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유(2022)와 윤건·서정옥(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행태 차원에서의 공정성 중 상호작용공정성과 사회 혹은 제도에 대한 공정성 모두를 다루었다. 고대유(2022)는 공정성을 기회에 대한 공정성과 조건에 대한 공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회공정성은 교육·취업·복지혜택기회가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며, 조건공정성은 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공공조직이 공정하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기회 및 조건 공정성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대유, 2022). 윤건·서정옥(2016)은 공정성을 정부공정성과 사회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사회,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고 밝혔다(윤건·서정옥, 2016). 그 밖에 이우진·하슬잎(2016)은 World Value Survey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기회의 평등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위의 연구들과는 다른 측면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루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은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중요한 영역이다. 만약 사회적 측면에서 불공정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하락하게 될 것이며(고대유, 2022),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신뢰가 높은 사회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 활동에 대한 공정성에 시민들은 민감하다. 최예나(2018)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부 업무의 경우,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사회구성원이 알게 되면 정부 업무능력에 대한 확신과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의 발전, 정보의 축적, 시민들의 알 권리 등이 진전될 미래에서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최근에는 성평등, 개인의 권리 증진과 같은 인권이 중요하며, 수도권과 지

방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존에 연구되어왔던 경제 및 사회적 분배구조, 정치 및 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 수혜 기회, 지역균형발전, 성별에 따른 대우, 병역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공정성에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공정성 영역에서 고려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정성은 크게 조직행태 측면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으로 구분되며, 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회, 제도, 정책 등이 공정하다고 인식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공정성이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윤진 · 서정옥, 2016; 이우진 · 하솔잎, 2016;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서울시에 집중을 하여 지방정부차원의 공정성이 어떻게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공정성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대도시 서울이 어느 영역의 공정성에 집중해야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과세 및 납세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2.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3.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4. 법 집행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5. 정치 활동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6. 성별에 따른 대우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7. 경제 · 사회적인 분배구조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가설8.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진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측정

이 연구는 서울시가 2022년에 발표한 “서울서베이”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조사 자료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정의 운영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가 2005년부터 매해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생활 만족도, 행복, 환경, 공동체, 정보격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연구의 목적인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적합하다.

〈표 1〉은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과 기초통계량이다. 먼저 2022년 서울서베이의 관측치는 39,340이지만, 무응답과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여 연구에 사용한 관측치는 최종적으로 16,303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핵심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2022년 서울서베이의 27번 문항(귀하는 다음 각 사람 또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이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울러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인 공정성은 2022년 서울서베이의 32번 문항(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이중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역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병역 의무 이행 등에 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다.

통제변수인 연령은 2022년에서 출생년도를 빼서 측정하였고, 성별 변수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로 정의하였다. 혼인여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인 미혼, 이혼, 별거, 사별을 “0”, 배우자가 있는 기혼 및 동거를 “1”로 설정하였다. 소득구간은 50만원을 기준으로 950만원까지 19구간으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는 “0”, 고등학교 졸업은 “1”, 대학교 졸업 이상은 “2”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역구에 따라서 정부신뢰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구별 이항변수(고정효과)를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는 서울시 지역구 간의 보이지 않는 변인(unobserved variable bias)의 영향을 통제하고 보다 연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Wooldridge, 2013).

〈표 1〉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부신뢰	16,303	2.943	0.969	1	5
공정(세금)	16,303	3.132	0.909	1	5
공정(복지)	16,303	3.231	0.911	1	5
공정(지역)	16,303	3.141	0.880	1	5
공정(법)	16,303	3.020	0.940	1	5
공정(정치)	16,303	2.924	0.955	1	5
공정(성별)	16,303	3.091	0.878	1	5
공정(분배)	16,303	3.032	0.871	1	5
공정(병역)	16,303	3.184	0.864	1	5
연령	16,303	48.449	14.012	19	89
성별	16,303	0.106	0.308	0	1
혼인여부	16,303	0.745	0.435	0	1
소득	16,303	7.719	2.534	1	19
교육	16,303	1.647	0.535	0	2



## 2. 연구방법론

이 연구에 사용한 모형은 독립변수의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이 분석법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는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보다 나은 추정치를 partialling out 과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dgeworth, 1885; Greene, 1993). 즉,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잔차들(residuals) 간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최우수 선형 불편 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자승기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한다. 더불어 종속변수가 서열을 가질 경우, 일반적인 OLS추정이 적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에 Ordered Probit 회귀분석도 같이 실시한다. 이렇게 OLS와 Ordered Probit 두 가지 모형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더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Akaike Information과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확인하여 최적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할 것이다. 연구에 사용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정부신뢰} = \alpha_i + \beta_1 \text{공정성} \dots + \beta_n \text{통제변수} + \text{지역구}_i + \epsilon_i$$

더불어 연구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마코프체인 몬테카를로(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적용한 베이지안(Bayesian) 회귀분석을 실시한다(Harvey, 1989). 이를 통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Congdon, 2003; 박순애 · 박민근, 2024). 게다가 회귀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모수에 대한 전체 확률 분포(posterior distribution), 과적합(overfitting) 방지, 후방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적합한 추정치를 제공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Slovic & Lichtenstein, 1971). 이는 정확하게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왔던 회귀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다(고길곤, 2023).

## IV. 연구결과

### 1. 회귀분석

〈표 2〉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에 대한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1열과 2열은 OLS모형을, 3열과 4열은 Ordered Probit모형을 각각 나타낸다. 아울러 2열과 4열은 지역구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이다. 우선 OLS와 Ordered Probit모형 중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43455.584, 42955.546)을 기반으로 더 좋은 모형 적합도(goodness-of-fit)

를 가진 것은 3열과 4열인 Ordered Probit모형이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통제한 지역구별 고정효과 모형이 더 좋은 BIC수치(42955.546)를 보이고 있으므로 마지막 4열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역균형발전, 성별에 따른 대우,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병역 의무 이행은 서울시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중 정부신뢰에 대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0.139), 병역 의무 이행(0.103), 성별에 따른 대우(0.093), 과세 및 납세(0.056),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0.034), 지역균형발전(0.034)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논의했던 다양한 측면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윤건·서정욱, 2016; 임재훈·윤영채, 2021; 고대유, 2022). 하지만 동시에 선행연구와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복지혜택의 영향이 그 무엇보다 큰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나타났다는데, 정부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선행연구와는 대치되는 결과이다(고대유, 2022). 이는 연구의 분석단위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다른 가능성으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빈부격차가 심하기에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를 대도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 치안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DeVerteuil, 2006). 결과적으로 서울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이 서울시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시에 대학이 많고 20대 청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에 나타난 지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대우가 정부신뢰에 큰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최근 들어 더 주목받고 있는 여성의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는 여성 비율이 더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24). 과세 및 납세는 조세의 공정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 또한 서울시에서 주의해야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전국 평균이 6.82%보다 8.18%p 이상 더 높은 15%로 나타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4). 이는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조세에 더 민감할 수 있기에 서울시 차원의 공정한 과세가 서울시 정부신뢰에 주요함을 보여준다.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와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분배공정성이 정부신뢰를 높인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종민·배정현, 2011). 다른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법 집행과 정치 활동은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법과 정치는 지방정부차원의 역할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수(0.020)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 중 연령(0.005)과 소득구간(0.008)은 증가할수록 서울시에 대한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노인층과 고소득층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신뢰가 높았다(0.127). 서울시의 여성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의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상문·전영옥, 2009). 혼인여부와 교육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정부신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OLS		Ordered Probit	
	[1]	[2]	[3]	[4]
공정(세금)	0.049*** (0.010)	0.050*** (0.010)	0.054*** (0.011)	0.056*** (0.011)
공정(복지)	0.117*** (0.010)	0.116*** (0.010)	0.138*** (0.011)	0.139*** (0.012)
공정(지역)	0.020 (0.010)	0.029** (0.010)	0.023* (0.012)	0.034** (0.012)
공정(법)	0.002 (0.010)	0.017 (0.010)	0.001 (0.012)	0.018 (0.012)
공정(정치)	-0.012 (0.010)	-0.006 (0.010)	-0.014 (0.011)	-0.006 (0.011)
공정(성별)	0.075*** (0.010)	0.080*** (0.010)	0.085*** (0.012)	0.093*** (0.012)
공정(분배)	0.039*** (0.011)	0.029** (0.011)	0.044*** (0.012)	0.034** (0.012)
공정(병역)	0.104*** (0.010)	0.091*** (0.010)	0.115*** (0.012)	0.103*** (0.012)
연령	0.005*** (0.001)	0.004*** (0.001)	0.006*** (0.001)	0.005*** (0.001)
성별	0.128*** (0.030)	0.106*** (0.030)	0.149*** (0.034)	0.127*** (0.034)
혼인여부	-0.051* (0.020)	-0.031 (0.020)	-0.055* (0.023)	-0.035 (0.023)
소득	0.006 (0.003)	0.006* (0.003)	0.007* (0.004)	0.008* (0.004)
교육	-0.014 (0.017)	-0.009 (0.017)	-0.016 (0.020)	-0.011 (0.020)
상수항	1.446*** (0.069)	1.045*** (0.082)	-	-
F-test	100.78***	57.75***	-	-
LR Chi2	-	-	1255.30***	1988.120***
관측치	16,303	16,303	16,303	16,303
AIC	44017.063	43313.900	43324.699	42639.883
BIC	44124.851	43606.466	43455.584	42955.546
R-squared	0.074	0.116	-	-
Pseudo R2	-	-	0.028	0.045

주: ()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5, \*\*p<.01, \*\*\*p<.001.

## 2. 베이지안 추론

〈표 3〉은 베이지안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베이지안 회귀분석은 12,500회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평균(mean)과 중위값(median)은 회귀분석의 계수를 의미한다. Markov Chain Monte Carlo(MCMC)을 통한 시물레이션 샘플들의 평균이며, 파라미터의 최적 추정치를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회귀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계수의 크기만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공정성에 관한 인식 중에 과세 및 납세(0.060),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0.127), 지역균형발전(0.025), 성별에 따른 대우(0.091),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0.048), 병역 의무 이행(0.113)은 정부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신뢰에 관해서는 앞선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병역 의무 이행, 성별에 따른 대우, 과세 및 납세,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지역균형발전 순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법 집행과 정치 활동은 앞선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머신러닝에 기반한 장기예측의 결과가 앞선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기에, 현재 연구의 결과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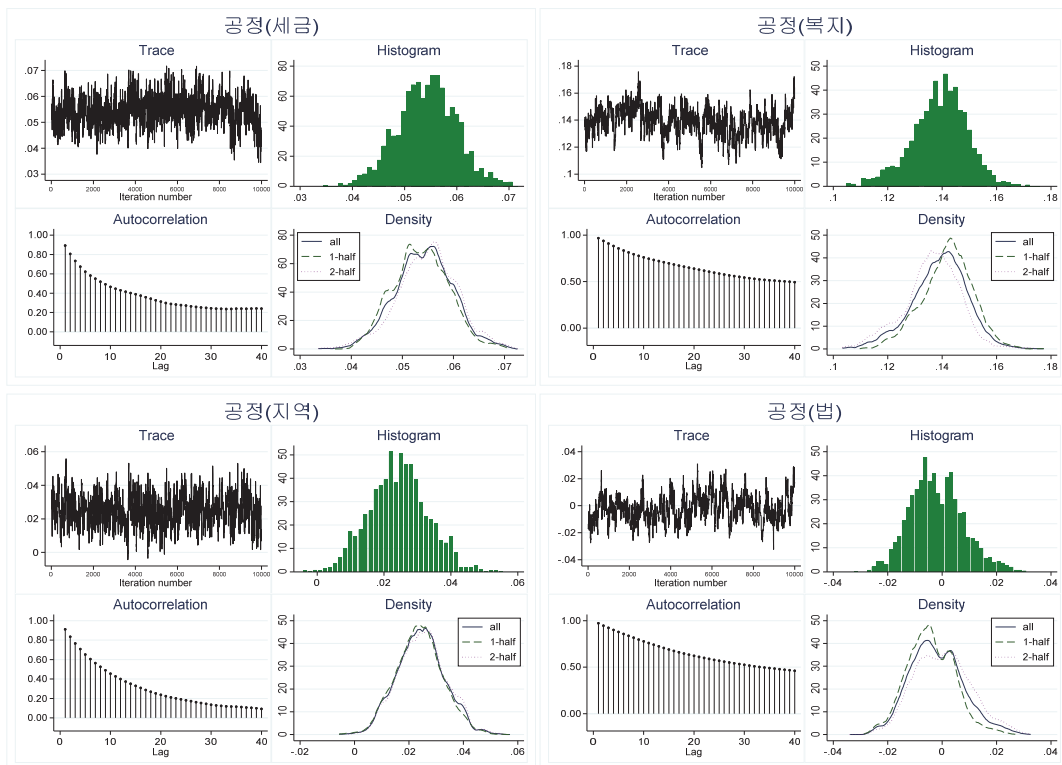
〈표 3〉 정부신뢰에 대한 베이지안 Ordered Probit 회귀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Monte Carlo 표준오차	중위값	95% 신뢰구간	
공정(세금)	0.060	0.009	0.001	0.060	0.043	0.078
공정(복지)	0.127	0.009	0.002	0.127	0.109	0.145
공정(지역)	0.025	0.009	0.002	0.026	0.009	0.042
공정(법)	-0.001	0.008	0.001	-0.001	-0.018	0.014
공정(정치)	-0.016	0.007	0.002	-0.016	-0.029	-0.003
공정(성별)	0.091	0.008	0.002	0.092	0.076	0.105
공정(분배)	0.048	0.011	0.003	0.048	0.026	0.069
공정(병역)	0.113	0.009	0.001	0.113	0.094	0.132
연령	0.006	0.001	0.000	0.006	0.005	0.007
성별	0.159	0.014	0.002	0.159	0.133	0.187
혼인여부	-0.056	0.006	0.001	-0.056	-0.069	-0.044
소득	0.009	0.003	0.000	0.009	0.002	0.015
교육	-0.024	0.010	0.001	-0.025	-0.043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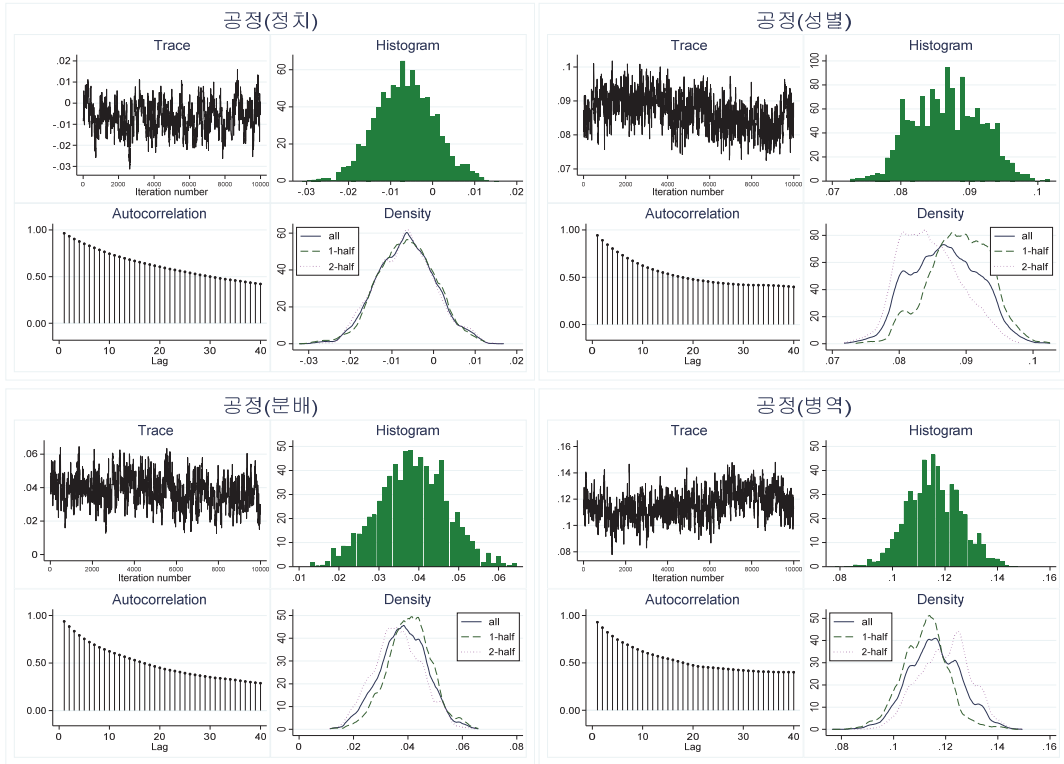
〈그림 1〉은 정부신뢰에 대한 베이지안 회귀 진단 그래프이다. Trace는 MCMC 시물레이션 동안 파라미터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프가 무작위하게 분포를 보이고 평균값에 잘 수렴한다면 안

정적인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utocorrelation은 분석 값의 자기상관을 시각화한 것이다. 자기상관 값이 낮으며 샘플 간의 독립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자기상관 값이 높은 경우는 추가적인 관측치와 더불어 시뮬레이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Histogram과 Density는 파라미터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분포의 형태가 정규 분포 형태를 보이면, 시뮬레이션 모델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역균형발전, 성별에 따른 대우,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병역 의무 이행은 안정적인 Trace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들의 예측범위가 긍정적이기에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법 집행과 정치 활동은 수치들이 부(-)와 정(+), 음(+)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자기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라미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시뮬레이션 모델이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를 예측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베이지안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안정적이며 변인들의 관계를 잘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정부신뢰에 대한 베이지안 회귀 진단 그래프

##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서울시민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병역 의무 이행, 성별에 따른 대우, 과세 및 납세,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의 정부신뢰에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정성의 증진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윤건·서정옥, 2016; 이우진·하솔잎, 2016; 고대유, 2022; 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이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회공정성이 정부신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동욱 외, 2023; 김나연, 2023). 아울러 이 연구는 복지혜택, 병역, 성별에 대한 공정성이 지방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성별, 납세, 지역균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법 집행과 정치 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법, 정치와 같은 영역은 지방정부의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마다 활용한

자료와 접근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하고, 서울서베이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머신러닝에 기반한 베이지안 추론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된다.

이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어떤 유형의 공정성이 주요한지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론적 한계는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 한계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베이지안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지만, 데이터 상의 오류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서베이는 미시자료의 개인단위 조사이기에 표본오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표본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Heckman 모형이나, 인과추론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매칭이나 이중차분법과 같은 접근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보이지 않는 편견(unobserved variable bias)”을 통제하기 위해서 변인들의 효과를 각각 확인하는 구조방정식이 아닌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향후 연구들을 통해서 더 확실한 이론으로 정립이 된다면 보다 정확한 차원의 측정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가 있다. 첫째, 일반적인 사회공정성의 향상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공정성에 집중해야하는지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대도시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지방행정의 측면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추론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서울시가 효율적인 행정과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성 증진에 힘써야 함을 제시한다.

공정성의 확보와 정부신뢰의 회복은 시급한 지방정부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낮은 지방정부신뢰로는 지역주민과 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전염병, 지진과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예상치 못한 위기는 지방정부의 대처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공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신뢰의 회복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적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길곤. (2023). 행정학 연구에서의 선형회귀분석 활용 쟁점들. 「한국행정학보」, 57(3), 327-355.
- 고대유. (2022).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147-170.
- 김나연. (2023).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배구조의 공정성 인식과 경제적 계층 간 갈등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61(3), 175-218.
- 김난도 · 최지혜 · 이향은 · 이준영 · 이수진 · 서유현 · 권정윤 · 한다혜 · 이혜원. (2021). 트렌드 코리아 2022. 미래의 창.
- 김동욱 · 홍상우 · 이숙중. (2023).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공정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69-194.
- 김정숙 · 정다정. (2019).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67-92.
- 머니투데이. (2024). “부자도 아닌데 상속세 냈습니다”...서울 과세비용 ‘15% 돌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2812074953066>.
- 문주옥 · 김민정. (2023). 2030 세대의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Financial Planning Review」, 16(1), 107-131.
- 박순애 · 박민근. (2024). 인구감소 시대의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한국정책학회보」, 33(2), 307-339.
- 박종민 · 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박푸름 · 김재일. (2018). 정부신뢰모형 도출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255-281.
- 박희봉 · 이희창 · 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7.
- 성민아 · 원숙연. (2021).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청와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 탐색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25(2), 381-412.
- 신상준 · 이숙중.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1-37.
- 신상준 · 이숙중 · 김보미. (2018). 경제적 · 정치적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아시아 5 개국 국민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1(3), 109-142.
- 윤건 · 서정욱. (2016).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21-44.
-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이나경 · 정영아. (2021). 실업률이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1(3), 242-275.
- 이상문 · 전영욱. (2009).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60, 215-231.
- 이숙중 · 유희정. (201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53-81.

- 이우진 · 하솔잎. (2016).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응용경제」, 18(3), 81-104.
- 이지호 · 이현우. (2015). 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한국정치연구」, 24(3), 1-27.
- 이현국 · 김윤호. (2014).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1-22.
- 임재훈 · 윤영채. (2021).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정부신뢰의 관계분석: 분위수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9(4), 187-214.
- 정광호 · 이재용 · 윤재원. (2021). COVID-19 팬데믹하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탐색: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4), 51-91.
- 최성락 · 전별. (2019).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 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238-248.
- 최예나. (2018).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21.
- 통계청. (202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 한국경제. (2019). '50년 라이벌' 매일 · 남양유업의 뒤바뀐 운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792601>.
- 홍지아. (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99-155.
- 홍찬숙. (2021). [기획특집 3] 청년의 무엇이 '성평등 프레임에서 젠더갈등과 공정성 프레임으로' 변화한 것인가?. 「젠더리뷰」, 62, 27-36.
- Adams, J. S. (2005). Equity theory. In Miner, J. B (Ed.), *Organizational behavior 1: Essential theories of motivation and leadership* (pp. 134-158, Chapter 9). New York: M.E. Sharpe.
- Avelino-Silva, T. J., Trujillo, N., and Udeh-Momoh, C. (2023). Fairness: from the guts to the brain—a critical examination by Atlantic fellows of the Global Brain Health Institute.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41125.
- Bargain, O., & Aminjonov, U. (2020). Trust and compliance to public health policies in times of COVID-1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2, 104316.
- Chen, H., Yang, Y., & Liu, S. (2019).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sense of social fairness. *Social Mentality in Contemporary China*, 111-130.
- Congdon, P. 2003. *Applied Bayesian Model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 DeVerteuil, G. (2006). The local state and homeless shelters: Beyond revanchism?. *Cities*, 23(2), 109-120.
- Edgeworth, F. Y. (1885). *Methods of statistics*.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181-217.
- Greene, W.H., (1993). *Econometric Analysis*, second ed. Macmillan, New York.

- Grimmelikhuisen, S., Porumbescu, G., Hong, B., & Im, T. (2013). The effect of transparency on trust in government: A cross-national comparative experi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4), 575-586.
- Harvey, A. C. (1989). *Forecasting, Structural Time Series Models, and the Kalman Fil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tlin, P., and Shutava, N. (2022). Trust in government: A close look at public percep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its employees. 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 <https://ourpublicservice.org/publications/trust-in-government>.
- McCarthy, M., Murphy, K., Sargeant, E., & Williamson, H. (202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piracy theories and COVID-19 vaccine hesitancy: a mediating role for perceived health threats, trust, and anomie?.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22(1), 106-129.
- Miller, D. S. (2016). Public trust in the aftermath of natural and na-technological disasters: Hurricane Katrina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incid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6(5/6), 410-431.
- Slovic, P., & Lichtenstein, S. (1971). Comparison of Bayesian and regression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judg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6(6), 649-744.
- Tomankova, I. (2019). An empirically-aligned concept of trust in government. *NISPAce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12(1), 161-174.
- Turner, B. S. (1986). *Equality*. United Kingdom: Ellis Horwood.
- Wooldridge, J.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 A modern approach* (5th ed.).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

박정인(朴正仁):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를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조직론, 인사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공공봉사동기: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4)”, “대학의 정원 결정에 대한 대학평가의 영향: 평가등급에 따른 디커플링 현상을 중심으로(202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문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3)” 등이 있다(jipark@yonsei.ac.kr).

박민근(朴旻根): 2024년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Penn State Harrisburg Policy Process Lab과 Center for Socially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소속되어있다. 관심 분야는 보건·인구정책, 인사관리, 인과추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Cannabis policy bundles and traffic fatalities in the American States over time(2024)”, “Do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processes influe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2023)”, “Consequences of the 2019 public charge rule announcement and publication on prenatal WIC particip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2023)” 등이 있다(mgpark@psu.edu; <https://sites.google.com/view/mingean-park>; <https://orcid.org/0000-0002-8074-3407>).



##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Fairness and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Seoul

Park, Jeongin

Park, Mingean

This study explores how fairness relates government trust and identifies what types of fairness local governments should emphasize to enhance this trust.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the Seoul Survey, conducted annuall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erformed ordinary least squares, ordered probit, and Bayesian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regarding opportunities to receive welfare benefits, fulfillment of military duties, treatment based on gender, taxation, economic and social distribu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re significant factors in government trust in Seoul. Moreover, perceptions of fairness in law enforcement and political activ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confirms that general social fairness positively associates with government trust. Second, to enhance government trust, efforts should focus more on welfare benefits, gender gap reduction, tax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law and political activities.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which areas of fairnes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to increase government trust at the local level.

Keywords: Public Trust, Fairness, Seoul, Seoul Survey, Bayesian Regression

